

野, '尹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함께 표결... 與 보이콧 대비

내일 오후 7시 탄핵안 일정 예정
與 본회의 불참 시 김건희 특검 통과
탄핵안 가결에 최소 이탈 8표 필요
국민의힘 '소장파' 5인, 尹 사과 요구
민주당, 국회 뒀던 헌재 재판관 추천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8년 만에 탄핵 정국이 돌아왔다.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이 70%가 높음에도, 여권의 이탈표가 존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안을 7일 저녁에 표결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즉 의결정족수가 200명 이상 찬성인 것이다.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표를 모두 모으면 192표가 되는 만큼,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이 찬성을 선택해야 가결된다.

문제는 여당의 이탈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권이 172석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128석)에서 28표 이상 이탈해야 가결되는 상황이었으며, 민주당은 여당 설득에 총력을 다했다. 그리고 투표 결과 62명 가량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탄핵은

보수진영의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 특히 2016년 당시 초선이었던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탄핵만은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갖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안 표결에 야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광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당론 추진' 관련 질문에 "탄핵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광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다"면서도 "혼란으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은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보복 적폐수사뿐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있어, 여당도 여론 추이를 살필 수밖에 없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또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도 69.5%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탄핵 찬성 여론을 근거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지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절대 군주가 되려 했던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표를 향해 "대법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점을 7일 저녁 7시쯤으로 정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표결 시점을 여유롭게 잡아 여당의 이탈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 표결도 동시에 함으로써 여당의 본회의 불참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또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저지에 앞장선 만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전날(4일) 새벽 계엄령 해제 요구안 표결에는 친한계 의원 18명이 동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5인(김소희·김재섭·김상욱·김예지·우재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 조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안 표결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위가 정지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헌정사상 유일하게 탄핵안이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부터 현재의 탄핵 결정까지 3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사건 심리를 하고,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현재는 3명이 공식인 6인 체제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회 뒀던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비상계엄' 국무회의 졸속 심의? 최소 3명은 개최 사실도 몰랐다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등 7명 참석
국무위원 중 최소 4명 추가 참석 추정
환경·고용·교육부장관, 연락 못 받아

정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열었으나,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국무회의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졸속으로 심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5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외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등 7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위원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한덕수 총리는 대변인실을 통해 사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모른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무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대외신인도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계엄을 반대했다. 조태열 장관과 김영호 장관도 회의에서 계엄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계엄을 제안했고,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계엄 선포시 경찰력이 투입된 만큼 사전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고, 회의에도 참석했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을 심의하는 사전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공식 확인해준 곳은 송미령 장관과 조규홍 장관 2명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은 참석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상목 장관의 경우도 회의에서 환율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거론하며 계엄 선포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다. 안덕근 장관은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시점 정부서울청사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완섭 환경부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 최소 3명은 사전 국무회의 개최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완섭 장관은 당일 저녁 출입기자단과 송년만찬 후 9시 40분께 자리를 떠나 세종 관사에

머물다. 계엄 해제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김문수 장관과 이주호 장관 역시 연락을 받지 못해 사전 회의에 불참했으나, 계엄 해제 심의에는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세종 일정으로 모든 회의에 불참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 회의에는 불참했으나, 사후 회의에는 참석했다. 이들을 포함해 강정에 국가보훈부장관 등 5명 중에서도 사전 회의 참석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개최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계엄 선포나 해제 시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식인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외한 19명 중 최소 11명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한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회의 참석 여부가 오리무중인 국무위원 중 최소 4명이 추가로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무위원들이 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이유는 '내란죄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박안수 "계엄사실, 담화 보고 알았다"

(계엄사령관)

국방위-행안위 현안질의
국회에 무장군 투입 명령 안 해
이상민 "내란죄" 표현 신중 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가 5일 열렸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처음 인지했고, 자신이 국회에 무장군 투입을 명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점심께 대통령과 일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누군가의 언질을 받고 지방에서 급히 상경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나"라고 물었다. 박 총장은 "갑작스럽게 지휘통제실로 이동했고 대통령이 담화하는 것을 보고 알았고 이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위법적인 계엄사의 포고령에 대해 수락했다는 물음에 "(제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전문적 수준이라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 김용현(전) 국방부장관에게 법무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 총장은 "김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됐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군부대를 누가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나"고 다그치자 박 총장은 "명령하지 않았다. 모른다"고 했다. 박 총장 옆에 있던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병력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는 여당 의원들이 본질의 시작 전에 자리를 떴고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는 "내란죄로 미리 규정하고 현안질을 한다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 바란다"고 이석했다.

윤건영 행안위 민주당 간사는 "오늘 상임위는 여야간 합의에 의해서 진행됐다. 그리고 12월3일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에 대해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었다"며 "미리 여당 의원이 약속한 듯이 자리를 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말도 문제가 됐다. 이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계엄선포와 관련 윤 대통령 등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하자 "제가 발언대에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내란죄',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